

## 캄보디아 2016: 민주주의의 퇴행

정 연 식\*

### I. 서론

캄보디아의 2016년은 정치 스캔들로 점철된 한 해였다. 야당 지도자의 망명, 야당 지도자의 성 추문, 반정부 인사의 피살,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 캄보디아의 2016년을 이해하는 주제어들이다. 이 주제어들은 모두 훈 센(Hun Sen)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인민당(Cambodian People's Party)의 권력 독점으로 수렴되는 함수를 그려냈다. 한편 이 함수의 이면에는 생존경쟁에 내몰린 빈곤층, 토지를 빼기고 쫓겨나는 농민들, 무분별한 벌목으로 별거승이가 되어가는 산, 탄압받는 시민사회, 무자비한 국가폭력,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침묵하는 언론까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숨어있다.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그 바탕 역시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배태되어 있다. 정치와 경제로 인한 민중의 분노는 반 베트남 정서로 배출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권력 독점을 향해 캄보디아인민당이 그려낸 스캔들 함수와 그 이면의 숨은 이야기들까지 모두 담아낼 수 있도록 정치, 경제, 국제관계의 순으로 캄보디아의 2016년을 되짚어 보겠다.

---

\*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freedom@changwon.ac.kr

## II. 정치

### 1. 권위주의 정권의 시혜 정책

2016년은 예년과 달리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등장한 한 해였다. 2013년 총선을 앞두고 캄보디아인민당이 무책임한 포퓰리즘 선동으로 몰아붙였던 캄보디아구국당(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의 공약들 중 노령연금 실시를 제외한 상당수 복지정책이 인민당에 의해 추진되는 흥미로운 현상이 연출되었다.

새해 들어 이목을 집중시킨 첫 번째 소식은 노동자종합건강보험 제도 도입 소식이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모든 질병 치료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는 보험이 실시될 것이며 질병에 따른 임금 결손도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비용은 사용자와 노동자 공동 부담으로, 노동자의 경우 급여의 0.8퍼센트 이내가 될 것이며 사용자 측에서 50%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Cambodia Daily [이하 CD] 2016/01/07).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2013년 총선을 앞두고 구국당은 캄보디아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인 봉제 산업 노동자 최저임금을 월 80달러에서 월 150달러로 인상한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급조했던 인민당은 실제로 총선 이후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해 2015년 월 140달러까지 끌어올렸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월 66달러에서 100퍼센트 이상 인상된 셈이다. 2016년 9월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시작되어 진통 끝에 월 153달러로 인상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용자 대표인 의류제조업 협회는 4.2달러 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의 중재로 13달러 인상에 합의했다(CD 2016/09/29). 인민당 정부가 한걸음 더 나아가 10월에는 임금 외 각종 수당 및 복지에 대한 비과세 방침을

밝히자 노동계는 임금 상승효과를 기대하며 적극 환영했다(CD 2016/10/10). 또한 공무원 최저임금에서도 구국당의 공약이 인민당에 의해 실천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2013년 총선 당시 공무원 최저임금을 월 120달러에서 월 25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구국당 공약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사기극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던 인민당이 총선 직후 월 150달러로 인상한 후 2015년 월 200달러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2016년 1월 정부는 2017년 말까지 월 250달러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CD 2016/01/12). 농민들에 대한 배려도 빠지지 않았다. 3월 말 정부는 미곡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CD 2016/03/31). 첫 수확 이후 쌀값이 폭락해 8월 1톤 당 250달러였던 쌀값이 9월 들어 193달러까지 떨어지자 농민들이 5호선 국도에 쌀 100톤을 쌓고 도로를 차단하는 시위를 벌였는데, 정부는 긴급 자금을 투입해 1톤 당 235달러에 수매하겠다고 약속하며 신속히 대응했다(CD 2016/09/28).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사실 이와 같은 형태의 정부 대응은 정상 국가에서라면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심히 억압적이고 심지어 약탈적이었던 과거 인민당 정부와 비교하면 분명히 진일보한 모습임에 틀림없다. 이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주기적인 선거로 인한 정부의 반응성 제고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 권위주의 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선거권위주의 체제라 할지라도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연식 2015; Morgenbesser 2016). 하지만 이와 달리 후원-수혜 관계를 기초로 한 후원자 정치(patronage politics)의 단면이 조금 더 확장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또한 캄보디아의 정치문화적 특수성 속에서 훈 센 총리에게 이상적 불교 군주의 이미지를 부여하는 시혜

정책의 확장으로 분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Jeong 2011).

주기적 선거에 의한 정부의 반응성 제고 모델과 후원자 정치 모델 혹은 불교 군주 모델은 정책적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후자 모델들이 캄보디아의 정치 현실에 더욱 부합하는 듯하다. 첫째는 이러한 정책들이 공표되고 시행되는 방식이다. 예컨대 노동자종합건강보험제도의 경우 이해 당사자들과의 사전 협의나 조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점과 실시 일정을 포함해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발표 후 1년이 지나도록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반응성 차원으로 설명되기에는 무리다. 최저임금 협상과 합의 과정에서 중재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실제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한 월 8달러 인상안에 훈 센 총리가 5달러 추가 인상을 지시해 월 153달러로 인상되었음을 강조하는 행태에서는(CD 2016/09/29) 분명히 후원자 정치 모델 혹은 불교 군주 모델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사실 훈 센 총리는 오래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전통시대에 국왕이 독점적으로 수행했던 역할을 수행해왔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다. 특정 지역을 방문해 성대한 행사를 열어 학교, 병원, 다리 등 기간 시설을 자신의 이름으로 기증한다. 많은 신설 학교 교명에 예외 없이 훈 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이러한 ‘시혜의 정치’ 속에 후원-수혜 관계의 양자적 성격이 다차원적으로 펼쳐진다. 훈 센 총리의 시혜는 대개 실질적으로는 조건부 시혜로서 선거에서 인민당 지지로 보상되어야 하며 야당이 승리할 경우 지원 약속이 취소되며 심지어 진행 중이던 공사도 중단된다. 또한 이러한 시혜에 소요되는 자금은 옥냐(oknha)로 지칭하는 기업가들이 제공하는데, 옥냐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특혜를 받는다.<sup>1)</sup> 역

1) 옥냐는 본디 국왕이 소수의 귀족에게 하사하던 작위에 준하는 호칭이었는데, 1994

순으로 정리하자면 훈 센 정부는 옥나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옥나는 특혜에 대한 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그 자금으로 훈 센 총리는 지역별로 시혜를 베풀고 그 시혜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표로 보상하는 구조다. 최근에 추가된 새로운 시혜 방식은 방문한 현장에서 국유지를 즉석 하사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방문 지역 국유지에서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층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불하를 총리가 즉석에서 명령하고 집행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초법적 시혜는 빠짐없이 방송을 타고 전파되며 자비로운 군주의 이미지를 복제해낸다(CD 2016/08/23).

후원자 정치 모델과 불교 군주 모델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두 번째 이유는 권력분점 불가의 원칙이 2016년에도 강하게 작동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반응성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기 위해서는 개혁을 통한 정부 혁신이 요구되지만 후원자 정치체제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 정부 개혁은 인민당 정부를 구성하고 지원하는 후원-수혜 네트워크를 와해시켜 기득권 세력 전체에 심대한 타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캄보디아는 21점을 얻어 전체 조사 대상국 168개국 중 150위를 차지했다.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선거감시단체 콤프렐(Comfrel)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년간 총 297건의 정치적 부패 사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35퍼센트 증가했다(CD 2016/03/30). 사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

년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 10만 달러 기부를 조건으로 일반인에게 부여하기 시작했다. 2004년 20명에 불과했던 옥나의 수가 2014년 700명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거대한 후원-수혜 관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CD 2014/06/01).

## 2. 정치공작과 권력 강화

정부 개혁 대신 인민당 정부는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데 주력했다. 권력독점을 위해 인민당은 공작정치라는 익숙한 수법을 재가동했다. 공작정치는 2015년 11월 13일 구국당 총재 삼 랭시(Sam Rainsy)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개시되었다. 당시 일본과 한국을 방문 중이던 삼랭시는 체포를 피해 귀국을 미뤘다. 굳이 출국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점과 2007년 외무장관 호으 남홍(Hor Namhong)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뜬금없이 끄집어내었다는 점에서 삼랭시를 국외에 묶어두기 위한 의도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점이 문제가 되자 12월 9일 체포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구속 중인 상원의원 홍 속 호우르(Hong Sok Hour) 사건 관련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홍 속 호우르는 베트남과의 국경 협약 문서를 위조해 유튜브(YouTube)에 올린 혐의로 8월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이 영상물에서 홍 속 호우르는 1980년대 훈센이 외무장관과 총리직을 수행했던 캄푸치아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Kampuchea) 정부가 베트남 정부와 결탁해 기존의 국경을 무효화하는 조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홍 속 호우르와 공범으로 삼 랭시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17년 형이 선고될 수 있다. 3월 말 삼 랭시는 국회의장 헝 삼린(Heng Samrin)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다시 한 번 기소되었는데, 이번에는 헝 삼린 정권이 1980년대 시하누크(Norodom Sihanouk) 국왕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였다(CD 2016/03/31).

삼 랭시의 부재가 장기화되자 구국당은 부총재 껌 소카(kem Sokha)의 총재대행체제로 전환했다. 그러자 3월 초 껌 소카와 내연녀 사이의 대화로 의심되는 녹취 파일이 온라인으로 퍼지기 시작했

다. 며칠 뒤 구국당 당사 앞에 구국당 지지자임을 자처하는 대학생 10여 명이 껌 소카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CD 2016/03/05). 더욱 이례적이었던 것은 테러와 국제범죄 전담 경찰이 해당 여성을 소환한 것이다(CD 2016/03/11). 뒤이어 구국당 당사 시위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껌 소카가 국회에서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CD 2016/03/15). 훈센 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남성은 껌 소카가 틀림없으며 두 사람의 사이가 내연관계임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CD 2016/03/18). 국회는 청원을 받아들여 껌 소카에게 국회에서 내연녀 문제에 대해 소명할 것을 명령했다(CD 2016/03/22).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대학생들은 부패범죄수사단에 수사를 요청했고 부패범죄수사단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를 개시했고 해당 여성은 녹취파일 속의 남성이 껌 소카임을 인정한 후 매춘 혐의로 기소되었다(CD 2016/03/25). 3월 한 달 캄보디아를 휩쓸었던 스캔들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부패범죄수사단이 기소된 여성에 대한 매수와 위증 교사 혐의로 구국당 소속 고향 마을 촌장을 체포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후 캄보디아 최대 인권단체인 애드혹(Adhoc) 소속 인사 5명, 애드혹 출신 선관위 사무차장, 유엔인권사무소 직원, 그리고 여성단체 실라카(Silaka) 대표 등 8명이 같은 혐의로 체포된 후 기소되었다(CD 2016/04/26; CD 2016/05/03). 검찰은 껌 소카에게 출두 명령을 내렸고 껌 소카는 소환에 불응하며 구국당 당사로 피신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아 구국당 당사를 기습 방문했지만 완강한 저항에 체포하는 데 실패했다(CD 2016/05/26). 현행 캄보디아 형법에서 소환 불응은 그 자체로 중범죄다. 국회는 기다렸다는 듯 인민당 단독으로 껌 소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CD 2016/05/31). 경찰은 구국당 당사를 포위한 채 모든 출입을 통제하며

압박했고 껌 소카는 구국당 당사에 실질적으로 감금된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구국당은 5월부터 국회 등원을 거부했고 9월에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훈 센 총리는 군부대를 동원해 구국당 당사 포위를 강화하고 시위에 나설 경우 즉각 무력으로 진압할 것이라고 위협했다(CD 2016/09/14). 이처럼 구국당이 마비 상태에 빠지자 10월에 삼랭시는 귀국 의사를 내비쳤는데, 정부는 모든 항공사와 공항에 삼랭시 귀국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1년간 전개된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야당을 무력화하기 위한 기획에 의한 것이었음을 드러냈다(CD 2016/10/22). 삼랭시는 훈 센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병모상 참석을 위한 일시 귀국을 요청했지만 거부되었다(CD 2016/11/26).

지루한 대치 국면은 11월 말 다시 한 번 급격히 전환된다. 3월 초 껌 소카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구국당사 앞에서 시위를 이끌었던 20대 초반 여성과 훈 센 총리의 차남 훈 마닛(Hun Manith) 장군이 나눈 대화가 유튜브 영상으로 게시되었다(CD 2016/11/29). 이들의 대화는 껌 소카 스캔들이 애초에 기획에 의한 것임을 의심케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한때 구국당 열성 지지자였던 것으로 알려진 이 여성의 페이스북에는 훈 센 총리로 의심되는 남성과의 대화도 게재되었지만 곧 삭제되었다. 훈 센 총리가 이 여성에게 백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훈센 총리는 평소와 달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훈 센 총리와 껌 소카 총재대행 사이에 정치적 타협이 이뤄졌다. 12월 1일 껌 소카는 공식적으로 사면을 요청했고 이튿날 바로 사면되어 구국당 당사를 나와 10개월 만에 귀가했다(CD 2016/12/05).

비록 완벽히 의도하고 기획했던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삼랭시에 대한 영장 발부와 껌 소카 스캔들을 통해 인민당은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우선 거의 1년간 야당을 마비시키고 국회

를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예컨대 2017년도 예산안은 구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아무런 수정 없이 통과되었다. 50억 달러 예산 중 세 목이 없는 8억5천4백만 달러는 긴급 재난 구호 등등을 위한 명목으로 잡혀있지만 실제로는 눈먼 돈이다. 교육 예산보다 2억 달러가 더 많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CD 2016/11/23). 사실 구국당은 2013년 총선 이후 정당으로서, 또한 야당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 기본적인 입법 활동조차 미미했으며(CD 2016/02/19)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껌 소카 스캔들의 단초가 된 통화녹취록도 2015년 말 구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법이 낳은 결과물이다. 이 법은 실질적으로 모든 통신에 대한 도감청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 사로부터 모든 통신 기록을 넘겨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CD 2016/03/14).

두 번째 성과는 야당의 분열이다. 실질적인 감금 상태에서 껌 소카 총재대행은 삼 랭시의 장기 망명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으며 마침내 정당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한 구국당 상태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삼 랭시에게 있다고 비난하기에 이르렀다(CD 2016/10/19). 주지하다시피 구국당은 2013년 총선을 앞두고 삼랭시당과 인권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정당이다. 의원들과 당직자들도 과거 소속 정당에 따라 양분되는 조짐마저 나타났다. 껌 소카의 사면 직후 국회는 구국당 원내 대표를 삼 랭시에서 껌 소카로 대체했다. 이 소식을 접한 삼 랭시는 자신이 구국당 원내 대표임을 천명했다(CD 2016/12/06). 훈센 총리는 껌 소카와 양자회담을 가진 직후 자신의 상대는 삼 랭시가 아니라 껌 소카라며 분열을 부추겼다(CD 2016/12/08).

한편 정부에 대한 비판과 도전에는 가차 없는 응징이 공식처럼 적용되었다. 예컨대 페이스북에서 시민혁명을 주장했던 한 대학생은

체포되어 선동죄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고(CD 2016/03/16) 4월 말에는 과감히 정부를 비판하는 몇 안 되는 인사 중 하나인 오우 위락(Ou Virak)이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된 후 기소되었다(CD 2016/04/26). 2016년 12월 현재 27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구금 상태에 있는데, 이 중에는 구국당 소속 의원 7명이 포함된다(CD 2016/12/05).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2016년 보고서에 첨부한 “캄보디아: 탄압의 새 물결”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는 교묘한 수단을 총동원해 시민권과 참정권을 말살했고 그 결과 캄보디아의 인권 상황이 최악의 수준에 있다고 비판했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연례보고서에서도 캄보디아는 참정권은 6단계, 시민권은 5단계로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의 연례인권보고서 또한 표현,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크게 제약되고 반정부 인사에 대한 폭력과 구금 위협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CD 2016/04/15).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보고서는 캄보디아의 언론 자유도를 180개국 중 128위로 평가했다(CD 2016/04/22). 비판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은 점차 교묘해져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보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 주로 동원되고 있다. ‘법치’를 내세워 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자기검열의 굴레 속에 가두는 방식이다(정연식 2016).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화이며 따라서 평화를 위협하는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에 대해서는 체포와 구금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훈 센 총리는 강변했다(CD 2016/05/06). 가장 역설적인 것은 껌 소키는 사면된 반면 껌 소카 스캔들과 관련해 체포된 인권운동가들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예고되자 훈 센 총리는 반역죄로 처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했고(CD 2016/05/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강

행되자 시위에 참여한 인권운동가 8명이 체포되었는데 그 이유는 검은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표면적으로는 검은색이 과거 크메르 루즈(Khmer Rouge) 복장을 상기시켜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색깔혁명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훈 센 총리가 직접 나서 특정 색깔을 상징으로 하는 시위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CD 2016/05/11).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매주 월요일 ‘검은 월요일’ 시위가 연말까지 지속되었고 그때마다 참가자들은 강제해산 당하고 체포되었다(CD 2016/11/01).

### 3. 민족주의와 반 베트남 정치

정부에 대한 비판 가운데 인민당 정부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비판은 베트남 관련 이슈들이다(정연식 2015). 태생적으로 베트남의 꼭두각시라는 꼬리표가 부착된 훈 센 정권에게 베트남은 실로 아킬레스건이었다. 2013년 총선을 전후로 야당에 의해 제기된 베트남의 영토 잠식 의혹은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5년 말 ‘크메르 인을 위한 크메르’ 대표 껌 레이(Kem Ley)와 청년 단체 활동가들은 따께오(Ta Keo) 주 국경 마을을 방문해 베트남 농민들이 캄보디아 영토 내에서 경작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은 베트남 영토로 간주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인민당 소속 해당 지역 촌장마저 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반 베트남 정서에 불을 붙였다(CD 2016/01/28). 정부는 이에 대응해 왕립 학술원 소속 학자들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조사단은 2월 초 중간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국경표지석이 지도상의 위치와 3~5미터 오차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 5개의 표지석이 지도상 위치와 일치하지 않아 약 100 헥타르의 영토가 베트남에게 넘어간 상황이라고 발표했다(CD 2016/02/01). 그러나

구국당 소속 움 삼 안(Um Sam An) 의원이 라따나끼리(Ratanakiri) 주 베트남과의 국경지대에 4만 헥타르에 달하는 고무농장을 베트남 군대가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베트남 이슈는 재점화되었다(CD 2016/02/03). 이후 이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고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회수했다(CD 2016/03/29).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초 움 삼 안 의원은 면책특권을 박탈당한 뒤 지도 위조와 선동 혐의로 체포되었고 결국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CD 2016/10/11).

베트남과의 국경 문제는 2016년 최대의 사건인 껌 레이(Kem Ley)의 피살로 연결된다. 껌 레이는 시민단체 ‘크메르인을 위한 크메르’(Khmer for Khmer) 대표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면서 인민당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얻은 인물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운영했던 시민단체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철저한 반 베트남 민족주의를 전파하는 데 전력하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껌 레이의 주장과 비평은 예외 없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베트남의 음모와 야욕에서 찾을 정도로 거칠었다. 훈 센 정부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그는 7월 10일 아침 프놈펜 시내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던 권총에 맞아 살해되었다.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 살해 동기는 빌린 돈 3천 달러를 갚지 않아서였다고 진술했다(CD 2016/07/11). 아무런 관계없는 인물이 근거 없는 이유로 살해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암살로 간주되기에 충분했다. 사망 후 보름이 지나 장례식이 거행되었는데 장지인 고향 따께오(Ta Keo) 주까지 이어진 장례 행렬에 최소 10만 명 이상이 나와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수만 명이 행렬을 따랐다. 정확한 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2012년 시하누크 전 국왕 장례식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으로 보도되었다(CD 2016/07/25). 껌 레이의 죽음과 장례는 캄보디아 내 반 베트남 정서가 어느 정도 팽창되어 있는지를 드러냈으며 베트남 문제가 인민당에게 잠재적으로 가

할 수 있는 정치적 파괴력의 크기를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사실 구국당의 이념적 정체성은 인민당의 약점인 베트남 문제에 집중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반 베트남 민족주의로 축소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베트남과 베트남 인들에 대한 증오는 구국당이 지지층을 확장하는 최상의 수단인 동시에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되어버린 듯하다. 이는 내무부가 캄보디아에 내 불법 거주자가 160,0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을 때 인민당은 이들에게 합법적 거주 기회 부여하겠다고 한 반면 구국당은 전원 강제 출국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CD 2016/08/22). 이러한 구국당의 요구는 불법 거주자의 절대다수가 캄보디아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무국적 베트남 인들이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걸고 출범한 구국당이 정작 실질적 캄보디아 시민인 이들의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한다는 점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이 문제에 대해 인권단체들조차 구국당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Frewer 2016).

이처럼 반 베트남 정서가 팽배하게 된 원인에는 국경문제와 더불어 불법 벌목과 수출 문제가 있다.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한 삼림 파괴는 이미 국내외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오던 터에 대부분이 정부 묵인 하에 허가 없이 벌목되어 전량 베트남으로 수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베트남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켰다. 실제로 2015년 대 베트남 목재 수출액은 3억8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캄보디아는 라오스를 제치고 베트남의 최대 목재 수입국이 되었다(CD 2016/01/22). 그런데 1월 초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 몬둘끼리(Mondulhiri) 주 정부 불하지에서 고무농장을 운영하는 옥나 한 명이 야생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벌목한 후 베트남에 밀수출한 혐의로 체포된 것이다(CD 2016/01/05). 정부는 대 베트남 목재 수출을 전면 중지시킨 후 훈 센 총리의 특별 지시에 따라 불법 벌목

근절을 위한 특별 조직을 구성해 베트남 국경지대 삼림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 그동안 성역처럼 군림했던 최대 불법 벌목 기업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저장 중인 원목을 압수했다(CD 2016/01/21). 이는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오랫동안 불법 벌목과 밀수가 횡행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정부의 제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며 또한 훈 센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후원-수혜 관계망에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옥냐에 대한 보호 중지와 특혜 박탈은 후원-수혜 관계의 기초인 상호 신뢰를 흔들어 궁극적으로 후원자 정치에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의 연루설을 차단하기 위해 훈 센 정부는 일부 옥냐에 대한 보호를 중지하는 교육지책을 써야만 했던 것이다.

하지만 불법 벌목 단속은 곧 호지부지되었고 정부의 금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목재 수출은 버젓이 재개되었다. 옥냐 기업들의 벌목 사업은 후원자 정치의 자금원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몫이 적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캄보디아의 정치경제를 구성하는 핵심이다. 즉 정부는 독점적 특혜를 옥냐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옥냐 기업들은 특혜를 발판으로 GDP 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훈 센 총리의 후원자 정치를 지원하는 구조인 것이다. 부동산 개발은 이러한 구조를 극명히 드러내는 대표적 산업이다. 부동산 개발은 지난 10여년 경제성장을 이끈 주력산업으로 정부가 무상으로 불하하거나 헐 값에 양도한 토지를 밀천으로 급성장을 구가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폭력을 동원한 거주민 강제 퇴거와 농민들의 경작지 점령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었다. 인권단체들의 집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약 70만 명이 이런저런 형태로 토지를 상실했다. “거의 매일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정부기관, 정부의 비호를 받는 기업과 개인들에 의해 토지를 빼기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CD 2016/02/04). 문제의 근원은 크메르루즈 기간에 완전히 말소된 후 다

시 만들어진 허술한 토지대장과 그에 따른 불분명한 토지소유권에 있다. 독일의 국제개발협력기구 GIZ는 2005년 이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토지 등기 사업과 함께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무상 토지 불하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훈 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6년 초 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인력을 철수시켰다(CD 2016/02/04). GIZ의 결정은 부동산 개발에 수반되는 토지검병 문제가 후원-수혜 관계를 바탕으로 작동되는 캄보디아 정치경제 구조 속에서 얼마나 풀기 어려운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 Ⅲ. 경제

캄보디아 경제는 2016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국민총생산액은 2014년 7.1%, 2015년 7.0% 성장에 이어 2016년에도 6.9% 성장해 19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15년 1,158달러였던 1인당 생산액은 2016년 1,200달러를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data.worldbank.org). 지난 20여년 평균 7~8%대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1인당 생산액이 크지 않은 것은 첫 출발점이 워낙 낮았기 때문이다. 1993년 1인당 생산액은 250달러에 불과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2016년 1인당 생산액은 거의 다섯 배 증가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에 힘입어 빈곤인구의 비중도 꾸준히 감소해 2015년 13.5%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빈곤선을 조금만 올려 잡아도 빈곤인구는 대폭 늘어날 만큼 성장의 과실은 상위계층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성장을 이끈 주력 산업은 의류 봉제 산업과 부동산 개발이다. 의류 봉제 산업은 600여 개 업체가 700,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며 국민총생산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CD 2016-10-19). 600여 개 업체 가운데 중국, 홍콩, 대만 기업이 90%를 이루고 있어 한국 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총생산액은 2015년 7% 성장에 그쳤지만 60억 달러를 수출해 전체 수출액 80억 달러의 75%를 차지했고 국민총생산액 증가분 7%의 2%를 담당했다(CD 2016/10/06). 2016년에도 전반적으로 이러한 성장세와 기여도가 이어졌을 것으로 예측된다.

성장을 이끈 또 하나의 동력은 부동산 개발이다. 특히 프놈펜 시내 고층 주상복합 시설에 투자가 집중되었는데 2016년 한 해에만 14,000채 정도가 공급되었다. 이는 2015년까지 완공된 23,000채의 6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문제는 실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 대상으로만 판매되고 있으며 구매자의 70%가 외국인이라는 점이다(CD 2016/07/07). 따라서 경제상황이 악화될 때, 특히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면 신규 투자가 중단되고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거품이 붕괴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실제로 2016년 상반기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한 판매는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CD 2016/08/31).

대내외 경제적 여건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캄보디아 경제는 산업 간 불균형이 크고 달러화가 실질적인 기본 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의류 봉제 산업과 부동산 개발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점은 캄보디아 경제의 최대 약점이다. 무엇보다도 전체 유동성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달러화의 가치 상승은 캄보디아의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예컨대 캄보디아의 봉제 산업 부문 최저임금은 현재 153달러로 이웃 베트남의 2017년 인상된 최저임금 4종 중 최저액인 258만동에 비해 훨씬 높으며 최고액인 375만동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달러화 가치가 상승할수록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이

베트남의 최저임금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마저 있다. 게다가 현재 추진 중인 베트남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전체 수출 물량의 40%가 유럽연합으로 수출되고 있는 캄보디아의 의류 봉제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CD 2016/02/04).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최악의 경우 봉제 기업들의 탈출과 그에 따른 수출 급감, 그리고 대규모 실업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부동산 시장도 사실 이미 거품이 터지기 시작했지만 중국계 자금의 유입으로 본격적인 붕괴는 유예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신규 투자가 급감하면서 즉각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전체 노동인구의 절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은 생산력이 정체 상태에 있으며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지난 10여년 현격히 벌어진 도농 간 소득 격차의 주원인이기도 하다. 그동안 경제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해온 관광산업 또한 성장세를 멈춘 상태에 있다. 전체 관광객 수는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에 있으며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O'Neill 2016).

캄보디아 경제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소득 대비 턱없이 높은 소비자 물가다. 1990년대 외부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달러화가 유통되면서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10%대에 육박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도 연평균 4.5%에 달했다(data.worldbank.org). 최근 낮은 국제 유가 덕분에 유류 가격이 자연스레 20% 이상 인하되고 전기료도 소폭 인하되면서 2015년 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3.9%에서 1.2퍼센트로 줄었지만 2016년 상반기에 다시 2%대로 증가했다(CD 2016/06/01).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결코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니다. 사실 현재 최저임금도 여전히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될 경우 국가와의 대립과 충돌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4월 국회를 통과한 새 노동법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5년 말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인민당이 준비한 법안을 검토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단 세 차례 회의를 거친 후 원안 그대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인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CD 2016/04/05). 노사 양쪽 모두 새 노동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는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캄보디아의류제조협회는 노조 결성 요건을 10명에서 사업장 내 노동자의 20% 이상 참여로 강화시키고 노동자들을 대표해 쟁의 권한을 갖는 노조의 요건을 사업장 내 전체 노동자의 30% 참여에서 과반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일견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조항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노조 결성 요건을 10명으로 완화시킴으로써 노조의 수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캄보디아 봉제 산업 노조의 특징은 이미 사업장 내 다수의 독립 노조가 동시에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해서 보면 노조의 수가 많을수록 노동자를 대표해 쟁의 권한을 갖는 노조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노조는 통합 형식으로 맞설 수 있지만 노조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들이 지나치게 많아 특정 노조를 불법 노조로 만드는 것이 용이해졌다. 또한 파업 의결 조건이 전체 노동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강화되면서 현실적으로 파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악법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CD 2016/01/19). 국제노동기구도 새 노동법이 협약에 위배되는 조항을 다수 담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CD 2016/11/09). 수차례 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여전히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작업장 환경과 복지 수준은 그야말로 열악한 상태에 있어 향후 경제적 여건이 악화될 경우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할 캄보디아 경제의 특징이자 문제점은 원조의존형 경제라는 점이다. 매년 국가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의 원조가 캄보디아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따라서 원조액 삭감이나 중지는 경제를 마비시킬 수조차 있다. 그런데 최대 공여자인 유럽연합을 포함해 다수의 공여국들이 캄보디아의 인권 탄압에 대한 제재조치로 원조를 중단하거나 인권 개선을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2015년 여름 시민사회를 옥죄는 시민사회단체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유럽연합의회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7억 달러 개발원조 집행을 정지시켰다(CD 2016/01/19).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1년 정부가 프놈펜 병각(Boeng Kak) 재개발사업을 위해 거주민들을 강제로 퇴거시킨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2008년부터 진행해오던 빈곤층 농민 토지 불하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이후 캄보디아에 대한 모든 지원을 동결했다.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세계은행은 동결 조치를 해제하고 사업 재개를 결정했지만(CD 2016/02/16) 이와 같은 조건부 원조와 간헐적 원조 중단이 실질적인 경제제재와 같은 효과를 가지며 장기 개발계획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이다.

#### IV. 국제관계

2016년 캄보디아의 국제관계를 장식한 주제는 중국의 급부상이다. 베트남과의 국경문제, 베트남의 꼭두각시라는 야당의 공격, 유럽연합의 조건부 원조 등으로 곤경에 빠진 훈 센 정부에게 중국은 구세주처럼 등장한 것이다.

7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헤이그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공개된 후

캄보디아는 이를 지지하는 아세안 공동 선언문 채택을 지지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중국의 환심을 샀다. 중국은 즉각 이에 대한 보답으로 2018년까지 3년간 36억 위안(약 5억4천만 달러)을 무상 원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2006년 6억 달러를 지원한 이래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조건도 없고 사후 평가조차 않는 눈먼 돈이기 때문에 훈 센 정부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 훈센 총리는 “중국은 말없이 행동으로 큰 도움을 주는 대국”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늘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유럽연합의 원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CD 2016/07/16). 이에 화답하듯 9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추가 원조를 약속했다(CD 2016/09/09). 중국이 제공하는 원조 규모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원조를 합한 것과 맞먹는 수준이며, 따라서 훈센 정부는 최악의 경우 유럽과 미국의 원조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훈센 총리는 9월 쌀값 폭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구매 보장을 약속한 후 중국 측에 3억 달러 지원을 요청하기까지 했다(CD 2016/09/20).

사실 캄보디아와 중국의 밀월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2012년 캄보디아는 당시 아세안(ASEAN) 의장국으로서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국을 강력히 비난하는 공동선언문 채택을 막은 전력이 있다. 아세안 역사상 공동선언문 합의 실패는 처음이었다. 2016년 2월에는 중국 군함 세 척이 캄보디아 해군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위해 시하누크빌(Sihanoukville)항에 정박했다(CD 2016/02/25). 이는 잠재적으로 베트남을 겨냥한 군사협력으로 풀이될 수 있다. 10월에는 양국 군사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전함 세 척이 다시 시하누크빌항을 찾았으며(CD 2016/10/18), 12월 중순에는 ‘금룡 2016’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CD 2016/12/16).

3월 말 훈센 총리는 리커창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프놈펜과 시하

누크빌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시엠티엠포(Siem Reap) 신 국제 공항 건설을 요청했다고 밝혔다(CD 2016/03/25). 6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된 아세안-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캄보디아는 아세안 측 공동선언문 채택을 무산시켰는데 이는 신임 외무장관 프락 소콘(Prak Sokhonn)이 프놈펜을 방문한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미 조율해둔 터였다(CD 2016/04/23). 훈 센 총리는 캄보디아가 중국의 알랑쇠가 되었다는 비난을 일축하고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철저한 중립을 견지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CD 2016/06/21).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파고든 캄보디아의 행보에 아세안은 무기력하게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10월에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큰 선물 보따리를 들고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총 2억3천7백만 달러 원조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더불어 9천만 달러 부채 탕감과 1천5백만 달러 군사 원조도 약속했다.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2억3천7백만 달러 중 무상으로 제공되는 1억7천8백만 달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캄보디아 정부에 직접 증여하는 눈먼 돈이다. 그 외에도 31개 협약을 체결하고 시엠티엠포 공항 건설, 국토연결망 국도 건설, 전력 및 관개 시설 건설, 중국-캄보디아 우호 병원, 시하누크빌 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약속했다(CD 2016/10/14). 이 정도 규모의 선물이라면 캄보디아의 철저한 실리주의 노선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큰 성과를 획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의 교역 규모 또한 2012년 23억 달러에서 2015년 40억 달러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CD 2016/10/07). 교역과 원조 외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근 폭증한 민간 투자 부문이다. 2010년 이후 중국은 이미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으며 특히 부동산과 소규모 서비스 부문에 대한 중국인들의 투자와 진출이 최근 캄보디아 투자 지형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Burgos and Sophal 2010; Hutt 2016). 중국의 민간 투자는 2013년 4억4천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캄보디아의 부동산 부문을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개발된 강상도시 쓰로이 찡와(Chroy Changvar) 지역은 중국이 아닌가 하고 착각할 정도로 한자 광고판으로 뒤덮여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전폭적 지원은 훈 센 총리의 후원자 정치에 활력을 부여하고 베트남과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인민당 정부의 권력독점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베트남은 더 이상 재정적으로 중국과 경쟁할 수 없으며 무력으로도 캄보디아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한 훈 센을 총리로 선택했던 베트남 지도자들은 대부분 사망했다. 든든한 중국을 등에 업은 훈 센으로서의 베트남의 괴뢰정권이라는 치욕적 꼬리표를 잘라낼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과감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훈 센 정부는 국경 문제에서 소극적이던 자세에서 벗어나 이제 적극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베트남과의 협상에 임하고 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양국 협상단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경 17%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합의했지만 어떤 지도를 조사의 기준으로 삼을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CD 2016/10/25).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훈 센 정부의 탈월입중(脫越入中) 정책은 구국당의 공격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제공할 것이다. 실제로 구국당 또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훈 센 정부의 태도와 친 중국 정책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큰 변화 없이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된 한 해였다. 비록 2016년 한국의 대 캄보디아 교역액은 8억6천만 달러(수출 6억5천만 달러, 수입 2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던 2015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 캄보디아 원조 규모는 2012년 6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6년 중점지원대상국에 캄보디아가 포함됨으로써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훈 센 총리의 남다른 한국 사랑은 외교정책에도 반영되어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 오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변화는 3월 말 지난 30년간 캄보디아의 외무장관을 역임한 친북 성향의 호으 남홍(Hor Namhong) 장관의 은퇴다. 이 소식을 접한 북한은 급히 외교사절단의 캄보디아 방문을 추진했지만 신임 외무장관 뿌락 소콘이 이를 완곡히 거절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CD 2016/03/18). 한편 4월 초 슛 디나(Suth Dina) 주한대사가 본국으로 소환된 후 부패범죄수사단에 의해 3년간 횡령 등으로 3백만 달러를 부정축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CD 2016/04/07). 슛 디나 대사 후임으로는 프놈펜 시 대변인이자 룡 위 살로(Long Visalo) 외무차관의 아들 룡 디만쎈(Long Dimanche) 신임 대사가 부임했다.

## V. 전망

훈 센의 업적을 기리는 대형 기념탑 건립 사업이 시작되었다. 왕궁 건너 푼레삽 강과 메콩 강 사이에 위치한 쓰로이 짱와 섬 중심, 캄보디아 최대 재벌이자 상원의원인 리 용 팻(Ly Yong Phat)이 기증한 24,000평에 대규모 시설로 건립될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한 건립을 위해 공개적인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CD 2016/02/28). 정부는 언론에서 훈 센 총리를 언급할 때 반드시 ‘삼땃’(samdech)을 붙이도록 강제하는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언론사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CD 2016/05/16). 삼땃은 본디 국왕에 의해 소수의 왕족에게만 부여되는 경칭인데, ‘가장 위대한 자’라는 뜻이다. 사실 훈 센 총리를 수식하는 공식 경칭은 ‘삼땃 악카 모하 세나 빠데이

떼쨌(Samdech Akka Moha Sena Padei Techo)'로 '가장 위대한 원수이자 가장 강력한 자'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2016년은 캄보디아의 '가장 강력한 자' 훈 센 총리가 더욱 강력한 자가 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권력을 강화한 한 해였다. 백성에게는 자비롭지만 약자의 무리에게는 냉혹하리만치 단호한 불교 군주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광범한 후원-수혜 관계망을 구축해나갔고 그 정점에 가장 강력한 후원자 중국이 등장한 한 해이기도 하다. 2017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치러지고 2018년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훈 센 총리와 캄보디아인민당은 국가권력과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승리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 정연식. 2015. "2013년 캄보디아 총선: 선거권위주의에 대한 도전." 『동남아시아연구』 25(1): 85-119.
- 정연식. 2016. "캄보디아의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퇴행." 『21세기 정치학회보』 26(3): 179-195.
- Burgos, Sigfrido and Sophal, Ear. 2010. "China's Strategic Interests in Cambodia: Influence and Resources." *Asian Survey* 50(3): 615-639.
- Frewer, Tim. 2016. "Cambodia's Anti-Vietnamese Obsession." *The Diplomat*. September 06.
- Hutt, David. 2016. "How China Came to Dominate Cambodia." *The Diplomat*. September 01.
- Jeong, Yeonsik. 2011. "The Idea of Kingship in Buddhist Cambodia." *Kyoto Review of Southeast Asia* 11.

- Morgenbesser, Lee. 2016. *Behind the Facade: Elections under Authoritarianism in Southeast Asia*. Albany: SUNY Press.
- O'Neill, Daniel. 2016. "Cambodia in 2015." *Asian Survey* 56(1): 207-213.

(2017.01.09. 투고, 2017.02.07. 심사, 2017.02.09. 게재확정)

<국문초록>

## 캄보디아 2016: 민주주의의 퇴행

정연식

캄보디아의 2016년은 민주주의가 퇴행을 거듭한 한 해였다. 집권당의 권력 독점을 위한 정치공작과 탄압이 점차 교묘한 수준으로 진화하며 의회정치와 시민사회를 옥죄며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 한편 표심을 얻기 위한 시혜성 정책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후원-수혜 관계의 정치구조는 더욱 고착화되어갔다. 캄보디아 경제는 2016년 한 해 대체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형적 경제구조 속에 내재된 문제점들이 서서히 노출되며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탈월입중(脫越入中)의 형세를 이룬 것이다. 하지만 노골적인 친 중국 노선은 동시에 베트남과의 갈등, 나아가 아세안 내부에 심각한 파열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배태하였다.

**주제어:** 캄보디아, 후원자 정치, 훈 센, 캄보디아인민당

<Abstract>

## Cambodia in 2016: Democracy Regressed

JEONG Yeon Sik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year 2016 in Cambodia witnessed the regression of Cambodian democracy. Political oppression and manipulation executed by the ruling Cambodian People's Party destroyed democracy and civil society. The patronage politics operating on the age-old patron-client relations was invigorated as the financial demands for populist policies amounted. The economy continued its growth in 2016. Yet serious problems embedded in its very structure began to surface as the situation in and outside became less promising. Concern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 year 2016 marked conspicuous pro-China policies, which may cause unexpected fric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future.

**Key Words:** Cambodia, patronage politics, Hun Sen, Cambodian People's Party

